

1조5천억 투입 광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만든다

광주 상무지구가 '직장·주거·여가'를 집약한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총 1조5천억을 투입, 상무지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젊고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천600㎡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 이날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기존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범 정부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화에 유리하고 경제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총 사업비 1조5천790억원(국비 5천220억원, 시비 3천970억원, 민자·기금 등 6천599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일대 85만2천600㎡ 면적을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 또 인근 9만1천280㎡에는 특구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직장·주거·여가' 집약 복합 개발
스마트 첨단·의료디지털·연구개발·마이스 등 융합 추진
시,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2031년 사업 완료 목표

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이 이뤄진다.

먼저 도심융합특구 부지 조성 개발에 총 6천140억원(국비 8억원, 시비 2억원, 민자 등 6억130억원)이 투입된다.

5천700억원(국비 1천414억원)이 투입

되는 특구 연계사업에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고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다.

광주시는 3천800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

업중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 개발, 컨설팅, 시장 분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금융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이 지역을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등 특구 지정 절차를 밟아 왔다.

광주시는 2023년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해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 사용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 기업 세계 지원과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도심융합특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광주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 도심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삶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사과 인사하는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제 주변 일로 염려... 국민께 사과"

내각·대통령실 인적개편... 부인 대외활동 "국민 싫다면 안해야"
윤여사 '국정 개입' 질의엔 "제 처 악마화시킨 것 있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자리에 돌아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반박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 윤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면 안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진수기자

도의회 "정부 쌀값 대책 맹탕·재탕" 비판

수확기 쌀값 20만원 지지 약속 실효적 대책 촉구

전남도의회는 7일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 맹탕·재탕·물타기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초 정부는 선제적이라 자평하며 20만호의 올해 쌀 사전격리를 발표했지만 재고쌀이 누

락된 정책이어서 쌀값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2면

실제 최근 산지 쌀값은 18만3천원(80kg/10월25일 기준)으로 10월5일(18만8천원) 이후 지속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만5천원) 보다 10.6% 낮아 수확기 농업인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정부가 2022년 90만호를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3년 수확기에 반짝 상승했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안정적인 대책을 질타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정부의 쌀 생산량 통계 예측 오류와 내년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20만호 이상 추가 시장격리,

재고쌀 격리 대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해 수확기 20만원 이상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 해 죽어라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수확기 쌀값은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매입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농민의 애절한 심경을 헤아려 양곡수급 책임자인 정부가 쌀값

을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재정기자

2024 광주교육

협치 한 마당

"The 새로운 협치를 그리다"

2024.11.16.(토) 10:00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

광주광역시교육청